

# 주간 통일정세

2017-50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2.18	北 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억세계 싸워나갈 맹세다저”(연합뉴스)
		北 “어느 나라나 우주개발·이용 권리...개별국가 독점물 아냐”(연합뉴스)
		北 신문, ‘핵강국 건설’ 김정일 업적 주장(연합뉴스)
		北, 몽골 주재 대사에 오승호 임명(연합뉴스)
	12.19	北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최룡해에서 최휘로 교체(연합뉴스)
	12.20	北 신문 “내년은 존엄·강대성 온 세상에 떨칠 의의 깊은 해”(연합뉴스)
		北 신문 “자위적 핵역제력 계속 강화해 나갈 것”(연합뉴스)
		北 “생물무기 반대 입장 일관 견지”(연합뉴스)
	12.21	北 “우리 앞 난국 엄혹...제재 속 ‘당 세포’ 역할 강조(연합뉴스)
		北 “美 사이버공격 우리와 억지로 연관...목과할 수 없어”(연합뉴스)
12.22	北 김정은 “美에 실제적 핵위협 가할 전략국가로 급부상”(연합뉴스)	
	北 김여정, 주석단 맨 앞줄 앉아...높아진 위상 ‘공식화’(연합뉴스)	
	北, 5년 만에 당 세포위원장 대화...‘제재국면 돌파’ 독려(연합뉴스)	
군사	-	-
경제	12.16	北 유입 화약·화학제품 감소...제재에도 북중 무역액은 증가(연합뉴스)
	12.20	조선신보 “北 경제전반 활성화 궤도...경제 호전 징표”(연합뉴스)
		올해 북한 곡물생산량 471만t...작년보다 2% 감소(연합뉴스)
사회 문화	12.16	北 신문, 女축구 E-1 챔피언십 우승에 “천만군민 크나큰 기쁨”(연합뉴스)
	12.19	日 언론 “北핵시설 책임자 숙청당한 듯...깡도붕괴 등 책임 추궁”(연합뉴스)
외교 국방	12.17	北 미사일부품 수출 중개 한국계 호주인 체포...“수백억 벌어줄뻔”(연합뉴스)
	12.19	트럼프 정부 新안보전략 구상 발표...‘북한’ 17번 등장(연합뉴스)
		北 신문, 힐러슨 대북 대화 발언에 “흥미 느끼지 않아”(연합뉴스)
		美 해군총장 “北에 더 위협이 될 것”...도발 시 군사적 압력 시사(연합뉴스)
		日, 北미사일 요격강화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 각의 의결(연합뉴스)
	12.20	맥매스터 “北핵무장 위협 참을 수 없어...필요시 강제로 비핵화”(연합뉴스)
		힐러슨 “北 준비 안되면 대화 못 한다...백악관도 대화지지”(연합뉴스)
12.21	VOA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北과 모든 무역 중단”(연합뉴스)	

## &lt;김정은 공개활동 동향&gt;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12.18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
12.22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석	-	-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7. 12. 18.

##### ■ 北 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역세계 싸워나갈 맹세다져”(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주기인 17일에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고 밝히고, 김정은이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영생홀을 방문했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존엄 높은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끝없이 강화 발전시키며 우리나라를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생전의 염원이 꽃피는 강대한 나라, 자주·자립·자위의 성새로 더 굳건히 다져 나가기 위하여 장군님의 혁명전사답게 더욱 역세계 싸워나갈 엄숙한 맹세를 다지시었다”고 밝힘.

2017. 12. 22.

##### ■ 北 김정은 “美에 실제적 핵위협 가할 전략국가로 급부상”(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미국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21일 평양에서 개막된 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 공화국 핵무력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 정치구도와 전략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와 북한을 둘러싼 제반 국제정치 정세를 밝히고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이어 그는 “우리의 전진로상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도전들이 앞에 가로놓이고 있지만 이를 낙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이러한 정세 하에서 오히려 우리 혁명의 전진 발전을 낙관하고 있다”며, “조성된 현 정세가 우리를 보다 더 단결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주체화, 자립화를 내들고 자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로 된다”며 ‘신심’을 갖고 앞날을 낙관하며 웃으며 투쟁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12. 18.

### ■ 北, 몽골 주재 대사에 오승호 임명(연합뉴스)

- 북한은 몽골 주재 대사에 오승호 전 외무성 유럽1국 국장을 임명함.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몽골 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로 오승호가 임명되었다”고 보도함.
- 오승호는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으로 2009년 8월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으며, 이후 2010년 9월께부터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를 지내다가 평양으로 복귀, 외무성 제3국장을 거쳐 올해 4월께까지 외무성 유럽1국 국장을 지냄.

2017. 12. 19.

### ■ 北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최룡해에서 최취로 교체(연합뉴스)

- 북한의 ‘체육강국 건설’을 주도하는 직책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의 후임에 최취 당 부위원장이 임명된 것으로 19일 확인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의 귀국 소식을 보도하며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취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위원장인 내각부총리 리룡남 동지, 체육상 김일국 동지, 관계 부문 일꾼들이 여자 축구선수들과 감독들을 마중하였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앞서 지난 10월 28일에는 ‘전국 도대항 군중체육대회-2017’ 폐막 소식을 전하면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으로 최룡해를 호명함.

2017. 12. 22.

### ■ 北 김여정, 주석단 맨 앞줄 앉아…높아진 위상 ‘공식화’(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21일 개막한 노동당

-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주석단에 앉아 있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공개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세포위원장 대회 개최 소식을 보도하며 김정은을 비롯한 당 최고위 간부들이 주석단에 앉아 있는 사진 여러 장을 게재함.
  - 여기서 김여정은 주석단 맨 앞줄, 주석단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김정은을 기준으로 오른쪽 다섯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김정은과 김여정 사이에는 최룡해·김평해·오수용·박태성 당 부위원장이 앉았음.

##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12. 22.

### ■ 北, 5년 만에 당 세포위원장 대회...‘제재국면 돌파’ 독려(연합뉴스)

- 북한이 5년 만에 당 최말단 조직 책임자들을 평양에 소집해 당 기층조직 강화를 통한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체제결속을 독려했는데,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가 전날 평양에서 개막한 소식을 전하며 “우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며 주체혁명 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추동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역사적 계기”라고 밝혔으며, 이번 대회에는 여러 경제 부문, 무력기관 산하 단위들의 당 세포위원장들과 각 부문의 당 위원장들, 중앙과 지방의 당 간부들이 참가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인 전쟁 관점과 투철한 주적관, 반제 반미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최후 결전의 시각이 오면 전민항쟁에 떨쳐나설 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세포위원장 역할을 강조했으며, 그는 김정은의 말과 지시, 당의 방침을 ‘즉시접수, 즉시대책, 즉시집행, 즉시보고’하는 ‘혁명적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도 독려했.
- 이날 대회에서는 일부 당 세포들의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도 언급됐다고 전했는데, 중앙통신은 “당세포가 일꾼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해 나가도록 당 생활 조직과 지도를 바로 하지 않아 국토관리를 비롯한 여러 부문의 사업들이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하여 비판되었다”고 공개함.

##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12. 18.

## ■ 北 “어느 나라나 우주개발·이용 권리…개별국가 독점물 아냐”(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인간생활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우주개발사업’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우주개발 사업이 철두철미 평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될 때 인류가 염원해온 우주정복의 꿈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인간생활의 영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무변광대한 우주공간에는 지구 상에 존재하는 국경선이나 경계선이 없으며 그 어느 나라나 우주를 개발·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우주는 그 어느 개별적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며 우주의 평화적 개발과 이용을 침해하는 것은 국제법에 대한 위반, 인류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힘.

## ■ 北 신문, ‘핵강국 건설’ 김정일 업적 주장(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8일 ‘주체적 핵강국 건설사에 불멸할 위대한 업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일은) 핵보유의 역사적 대업을 이룩하시어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핵 위협을 산산이 짓부쉬 버리고 우리 민족의 운명과 세계 평화를 수호하신 불세출의 위인”이라며 김정일 집권기의 핵 관련 대미 대결사(史)를 조명함.
- 신문은 ‘1차 북핵 위기’에 해당하는 북한의 1993년 준전시상태 선포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관련해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은 먹을 물린 송냥이 신세가 되어 대화 마당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며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거론한 뒤 “세계는 그 어떤 강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위대한 강국을 보았다”고 자찬함.

2017. 12. 20.

## ■ 北 신문 “내년은 존엄·강대성 온 세상에 떨칠 의의 깊은 해”(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거둔 성과를 평가하면서 내년을 “주체 조선의 존엄과 강대성, 창창한 전도를 온 세상에 떨치게 될 의의 깊은 해”라고 강조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 조선은 필승불패이다 - 위대한 대승리의 해 2017년을 돌이켜보며’라는 제목의 기사

에서 “2018년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을 맞는 혁명적 대경사의 해”라며 이같이 밝힘.

- 신문은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가 보다 가까워질 희망찬 새해에 연속공격, 계속 전진하여 더 큰 기적적 승리를 쟁취하려는 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역센 각오”라고 주장함.

#### ■ 北 신문 “자위적 핵억제력 계속 강화해 나갈 것”(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올해 있었던 미국과 대결구도를 돌아보면서 “자위적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쳐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 신문은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 “우리 공화국은 강위력한 자위적 억제력을 더욱 역세계 틀어쥐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함.
- 노동신문은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공중훈련 등 올해 한반도에서 치러진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거론하면서 “합동군사연습은 모두 핵 선제공격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는 것을 목적인 것”이라며 “우리가 선택한 병진의 길이 천만번 옳았다는 것을 다시금 입증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미국은 제재 범위를 더욱 확대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고 우리와의 정치, 경제, 무역 관계를 끊으라고 강박했다”며 “그 어떤 제재압살책동도 튼튼한 자립경제의 토대에 의거한 우리 공화국의 승리적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덧붙임.

#### ■ 北 “생물무기 반대 입장 일관 견지”(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20일 공보실장 담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생물무기금지협약 체약국으로서 생물무기의 개발과 생산, 저장과 보유를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함.
- 담화는 “최근 미국의 일부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우리가 대량살육무기 개발 야심의 일환으로 생물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담화는 또 “미국이 우리의 그 무슨 생물무기 개발을 운운하는 것은 존엄 높은 우리 국가를 불량배로 매도하여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대조선(대북) 제재·압박을 합리화해보려는 흥심의 발현”이라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찾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함.

2017. 12. 21.

■ 北 “우리 앞 난국 엄혹”…제재 속 ‘당 세포’ 역할 강조(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당 최하부 조직 책임자들의 대회인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에 앞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맞서기 위한 당 기층조직의 역할 강화를 주문함.
- 노동신문은 이날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대회’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오늘 우리 혁명 앞에 가로놓인 난국은 엄혹하며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투쟁과업은 매우 무겁고 방대하다”면서 “우리 당은 부닥친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혁명을 새로운 양상으로 고조시키는 데서 당세포들의 역할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고 세포위원장 대회를 또다시 큰 규모로 조직하였다”고 전함.
- 신문은 또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핵 전략자산들을 총동원한 핵전쟁 도발 책동과 병행하여 야만적인 제재 결의들의 연이은 조작과 테러지원국 재지정 높음을 벌이면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모든 당 조직들과 당세포위원장들은 오늘의 준엄하고 복잡다단한 정세 속에서 당세포위원장들의 대회합을 소집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 깊이 새기고 당세포를 수령 결사옹위 정신으로 만장약된 강철의 전투조직으로 만드는 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美, 사이버공격 우리와 억지로 연관…목과할 수 없어”(연합뉴스)

- 북한은 21일 “미국이 사이버 공격 문제를 가지고 감히 우리 국가를 직접 걸고 드는 망동을 부리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목과할 수 없다”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미국이 국제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사이버 공격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관시키면서 국제적인 반(反)공화국 대결을 고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문답에서 거론한 ‘사이버 공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워너크라이’(WannaCry)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이며, 외무성 대변인은 “이미 수차에 걸쳐 명백히 언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 어떤 사이버 공격문제와도 전혀 연관이 없으며 이로부터 미국의 일토당토한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함.

## 2. 군사

### 가. 군사 및 핵미사일

- 특이사항 없음

###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 3. 경제

###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경제 실태

2017. 12. 20.

- **조선신보 “北 경제전반 활성화 궤도…경제 호전 징표”(연합뉴스)**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0일 북한의 국가 경제 전반이 ‘활성화의 궤도’에 들어섰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는 이날 ‘2017년 조선(북한)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 실천으로 입증된 병진의 정당성과 생활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최근 자동차공업 현대화 추진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힘.
- 이 신문은 “최근 연간 조선에서는 설비 국산화에 기초한 경공업 공장들의 개건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어 왔는데 이제는 기계공업의 정수이며 방대한 자금이 투입될 운전기계(자동차) 공업의 개건 현대화가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고 언급했으며, 이어 “이는 나라의 경제 전반이 활성화의 궤도에 확실히 들어섰음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힘.

- **올해 북한 곡물생산량 471만…작년보다 2% 감소(연합뉴스)**

- 농촌진흥청은 올해 북한 지역 기상과 병충해 발생·비료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 작황 자료·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결과 등을 분석해 ‘2017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정치를 20일 발표함.

- 북한에서는 올 한해 총 471만t의 곡물이 생산돼 지난해 481만t에 비해 2%가량 줄었는데, 올해 생산된 곡물 중 쌀이 219만t으로 가장 많았고, 옥수수 167만t, 감자류 53만t, 콩류 및 기타 잡곡류 17만t, 보리류 15만t 등의 순임.
- 쌀 생산량은 작년 대비 3만t(1%) 감소, 옥수수 생산량은 3만t(2%) 감소, 서류(감자) 생산량은 2만t(4%) 감소, 보리류는 지난해보다 2만t(12%) 감소하였는데, 이점호 농촌진흥청 국제협력기술과 과장은 “올해는 북한 기상조건이 그다지 좋지 않아 곡물 생산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름작물 생육 기간에 강수량이 다소 적었던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함.

####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12. 16.

##### ■ 北 유입 화약 화학제품 감소...제재에도 북중 무역액은 증가(연합뉴스)

-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에 북한이 수입한 화약 화학제품은 5만 1천 달러어치로 2015년보다 46.3% 줄었는데, 다소의 시세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증감률에 비춰보면 이들 품목의 북한 유입량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됨.
-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뤄진 수입 규모는 액수 기준으로 2015년 32억 2천 600만 달러였는데 2016년에는 34억 2천 200만 달러로 늘었음.
- 북한의 중국 수출액은 같은 기간 24억 8천 400만 달러에서 26억 3천 400만 달러로 증가함.

#### 4.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관련

###### ■ 특이사항 없음

#####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 특이사항 없음

## 라. 사회 동향

2017. 12. 16.

## ■ 北 신문, 女축구 E-1 챔피언십 우승에 “천만군민 크나큰 기쁨”(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의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우승을 보도하며 “천만 군민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 준다”고 추어올림.
-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여자축구 선수들의 대회 우승 기사를 게재하고 “우승의 영예를 떨친 조국의 장한 딸, 미더운 우리 여자 축구선수들의 통쾌한 승전 소식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떨쳐나선 천만 군민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고 새로운 기적과 위훈 창조에 힘 있게 고무 추동하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우승을 차지하고 환호하는 선수들의 모습과 경기 장면 등을 담은 사진을 기사와 함께 실었음.

2017. 12. 19.

## ■ 日 언론 “北핵시설 책임자 숙청당한 듯…갱도붕괴 등 책임 추궁”(연합뉴스)

-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 북한군 출신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핵시설 건설을 담당하는 북한 노동당 131지도국의 국장이 숙청당했다며 그가 처형을 당했다는 미확인 정보도 있다고 보도함.
- 아사히는 해당 국장은 창설 때부터 131 지도국에서 일한 전문가로, 최근 군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 숙청당했다고 설명했으며, 아사히는 숙청 이유에 대해 9월말 실시한 6번째 핵실험이 늦어진 것과 갱도가 붕괴한 것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한편 아사히는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군총정치국의 황병서 국장이 해임돼 차수에서 상좌로 6계급 강등된 뒤 전방부대로 좌천됐다고 전함.

## 5.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7. 12. 19.

## ■ 트럼프 정부 新안보전략 구상 발표…‘북한’ 17번 등장(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각) 내놓은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핵·미사일을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는데, 68쪽 분량인 NSS 보고서에서 ‘북한’이라는 용어가 무려 17차례나 등장함.
- 보고서는 “북한의 핵확산과 대량과괴무기 고도화 위협을 무시하면 할수록 그러한 위협은 더욱 나빠지고 우리의 방어 옵션도 적어진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도 걱정했으며, 보고서는 “사거리 확대와 더불어 개수와 형태, 효력이 날로 증강하는 미사일이 북한과 같은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 살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적시하였으며,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항상하겠다”고 강조함.

#### ■ 北 신문, 틸러슨 대북 대화 발언에 “흥미 느끼지 않아”(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전제조건 없는 대북 대화’ 발언에 대해 “미국이 일관성이 없이 내붙였다 떼곤 하는 대화 간판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19일 밝힘.
- 신문은 이날 ‘우리의 핵 억제력은 흥정물로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틸러슨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타령과 그에 대한 백악관의 행태를 보면 대화공세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우리가 핵 포기를 논하는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상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내용을 담은 유엔안보장이사회 대조선(대북) 제재결의를 조작하기 위한 사전포석을 깔아놓으려는 시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함.
- 이어 “전제조건 있는 회담을 제기하든, 전제조건 없는 회담을 제기하든 미국이 노리는 것은 우리 국가의 핵 포기”라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선택한 핵 무력 강화의 길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함.

■ **美 해군총장 “北에 더 위협이 될 것”…도발 시 군사적 압력 시사(연합뉴스)**

- 일본을 방문 중인 존 리처드슨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19일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우리는 더 상대(북한)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날 미해군 제7함대의 거점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기지 에서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추가 군사적 압력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리처드슨 총장은 “(북한에 대한) 도발 의도는 없다”면서도 “(북한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측이 이례의 태세로 작전을 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은 전례없는 긴박한 위협”이라며 북핵·미사일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는 군사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2017. 12. 20.

■ **맥매스터 “北핵무장 위험 참을 수 없어…필요시 강제로 비핵화”(연합뉴스)**

-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필요하다면 우리는 북한 정권의 협력 없이도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함.
-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과 관련해 “우리는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으며,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적인 해결에만 전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라며 어떠한 해법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어 “북한은 전 세계 모든 문명인들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은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경고함.

■ **틸러슨 “北 준비 안되면 대화 못 한다…백악관도 대화지지”(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틸러슨 장관은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만나 북핵 사태에 대한 논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캐나다 CBC뉴스 등

외신들이 보도함.

-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까지 이러한 (대북) 압박 캠페인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지기만 할 뿐이라는 사실”이라고 경고했으며 이어 “대북 압박 캠페인을 증진할 방법을 계속 찾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당신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국제 공동체의 단합된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함.
-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덧붙였으며, 다만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외교적 압박”이라면서 “백악관은 북한과의 외교 대화를 지지하며 북한도 그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외교 해법이 최우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함.

## 나. 북·중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다. 북·일 관계

2017. 12. 19.

### ■ 日, 北미사일 요격강화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 각의 의결(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9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도입하기로 의결함.
- 이지스 어쇼어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고성능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방식의 탄도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이며,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탄도미사일 방위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함.
- 앞서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종전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규정한 바 있음.

## 라. 북·러 관계

2017. 12. 21.

## ■ 특이사항 없음

##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12. 17.

## ■ 北 미사일부품 수출 증가 한국계 호주인 체포…“수백억 벌어들임”(연합뉴스)

- 호주 연방경찰은 17일 암호화된 통신 수단을 이용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판매를 증가하고 공급을 논의한 혐의로 한국계 남성 최모(59) 씨를 전날 밤 시드니 자택에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발표함.
- 한국에서 태어난 최 씨는 호주에서 30년 이상 생활한 호주 시민권자이며,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서 북한 미사일 부품을 외국에 팔 수 있게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고, 그가 팔려던 것에는 탄도미사일 유도 관련 소프트웨어와 북한의 군사적 전문지식이 포함돼 있음.
- 경찰은 최씨가 북한의 고위관리와 접촉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며, 북한산 무기나 미사일 부품이 호주로 들어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2017. 12. 21.

## ■ VOA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北과 모든 무역 중단”(연합뉴스)

- 서부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가 북한과 모든 교역관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1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의 알파 배리 외무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모든 무역관계를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부르키나파소 외무부가 페이스북을 통해 전함.
- 부르키나파소 현지 인터넷 매체인 ‘르 파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리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고 자체 조사 결과 민간 차원의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Ⅱ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2.19	외교부 “美 새 국가안보전략, ‘한미동맹 강력’ 재확인”(연합뉴스)	
		문 대통령 “한·미 군사훈련 연기, 미국에 제안”(자유아시아방송)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2.18		중외교부 “文대통령 방중 성공적…한중관계 개선 추진키로” (연합뉴스)
			中군용기 5대, 이어도 서남방 KADIZ 침범…공군 긴급출격 (연합뉴스)
			中國방부 “中군용기 편대, 韓日방공식별구역 진입…연례성 훈련”(연합뉴스)
	12.19	“반덤핑 조사 공정하게 해달라”…한국, 中 상무부에 요청 (연합뉴스)	
12.20		중외교부 “한국여행 금지 듣지 못해…한중교류 적극적 입장” (연합뉴스)	
		中, 불법조업 中어선 겨냥 발포 韓해경에 “과격수단 사용말라” (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2.17		아사히 “韓, 北화성-15 발사후 한일국방장관 통화요청 거절” (연합뉴스)
	12.18		“日, 文대통령 방일안 대응여부 검토…위안부합의 준수가 조건”

		(연합뉴스)	
	12.19	한일 외교장관 “강한 대북 압박과 대화 위한 외교노력 지속키로”(연합뉴스) 文대통령 “과거사 어려움 지혜롭게 극복 희망”...아베에 메시지 (연합뉴스)	
	12.20	강경화 “文대통령, 평창올림픽전 일본 방문 논의 없어”(연합뉴스)	
	12.21		“日외무상, 강경화 장관에 ‘아베 평창 참가 어렵다’ 전달”(연합뉴스)
	12.22	한일, 21~22일 도쿄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2.18		中, 탈러슨 대북 대화 발언 '후퇴'에 “의미있는 한 걸음 가길”(연합뉴스)
			中 “美국가안보전략, 미중 상호 신뢰에 기여해야”(연합뉴스)
	12.19	트럼프 “중·러는 라이벌”...‘열강들의 경쟁시대’ 환원 선언(연합뉴스)	중국, ‘中=경쟁자’ 美안보전략에 반발...“대립시 모두 패배” 경고 (연합뉴스)

			中외교부, 美신안보전략 겨냥 “냉전·구시대적 사고 버려야” (연합뉴스)
	12.21		中國방부 “美 신국가안보전략 사실 왜곡...中, 패권 추구 안 해”(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미국</b>	<b>일본</b>
미일 관계		특이사항 없음.	
<b>분류</b>	<b>일자</b>	<b>미국</b>	<b>러시아</b>
미러 관계	12.16	트럼프 “푸틴과 주로 北문제 얘기해, 러시아 도움 원한다”(연합뉴스)	
			러, 대북 압박 강화 美요구 거부...“어떤 제재도 성과 못낼 것” (연합뉴스)
	12.19		러시아 “美 새 국가안보전략, 제국주의...새 국제질서 부정” 비판 (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일본</b>
중일 관계	12.22		중-일 해빙 무드에 日대형은행들 중국서 ‘판다 채권’ 발행(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러시아</b>
중러 관계	12.20	中·러 외교수장 전화통화...한반도 문제 논의(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일본</b>	<b>러시아</b>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7. 12. 19.

##### ■ 외교부 “美 새 국가안보전략, ‘한미동맹 강력 재확인’(연합뉴스)

- 외교부는 19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힘.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 안보, 경제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신 국가안보전략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노 대변인은 “특히 국가안보전략 발표를 통해 미국이 역내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공약을 배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등 공동의 위협 대응과 이익 보전을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점을 평가한다”고 말함.

2017. 12. 19.

##### ■ 문 대통령 “한·미 군사훈련 연기, 미국에 제안”(자유아시아방송)

-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통상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시작하는 연례 한·미 연합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힘.
-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경강선 대통령 전용 고속열차에서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를 갖고, “한국과 미국 양국은 올림픽 기간 동안 예정돼 있는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 문 대통령은 “이미 나는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춘다면 그것은 평창올림픽의 안전한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나. 한·중 관계

2017. 12. 18.

### ■ 中외교부 “文대통령 방중 성공적…한중관계 개선 추진키로”(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13~16일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총평을 묻는 질문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진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힘.
- 그는 “방문 기간 시 주석과 문 대통령은 중한 관계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한반도 등 지역 문제와 관련한 협력 강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교환했고, 중요한 공동 인식에 도달했다”고 언급함.
- 화 대변인은 “한중 양국이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서로 진심으로 대하는 이웃의 도리를 견지하고 협력 공영에 근거해 민감한 문제를 계속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함.

### ■ 中군용기 5대, 이어도 서남방 KADIZ 침범…공군 긴급출격(연합뉴스)

- 중국의 폭격기와 전투기를 포함한 군용기 5대가 18일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격함.
-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10시10분경 중국 국적의 군용기 5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고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고 밝힘.
- 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 포착 즉시 MCRC와 중국 지난(濟南)군구 방공센터 사이에 구축된 핫라인으로 중국 측에 KADIZ 진입을 경고했고, 중국은 “일상적 훈련”이라며 “한국 영공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함.

### ■ 中군방부 “中군용기 편대, 韓日방공식별구역 진입…연례성 훈련”(연합뉴스)

- 중국의 폭격기와 전투기를 포함한 군용기 5대가 18일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 상공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가운데 중국 국방부가 “연례 훈련을 목적으로 한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확인함.
- 선진커(申進科) 중국 공군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중국 공군의 연례 훈련 계획에 따른 정례적인 훈련”이라며 “관련 국제법과 국제 행위에 부합하며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발언함.
- 그는 이어 “동해는 일본의 해역이 아니고 쓰시마 해협 역시 영해가 아니다”며

“유엔해양법조약에 근거해 모든 국가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함.

2017. 12. 19.

■ **“반덤핑 조사 공정하게 해달라”…한국, 中 상무부에 요청(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중국 상무부에 “현재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를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함.
-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17차 한중 무역구제(貿易救濟) 협력회의’와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요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힘.
- 한편,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위원회에서 제안한 ‘반덤핑 협정문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측의 지지를 요청함.

2017. 12. 20.

■ **中외교부 “한국여행 금지 듣지 못해…한중교류 적극적 입장”(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이 일부 중국 내 여행사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했다는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한국여행이 금지됐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으며 중국은 한중교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함.
- 화 대변인은 “당신이 제기한 상황을 들어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다만 내가 아는 바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성공적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함.
- 화 대변인은 “양국 지도자들은 중한 관계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공동 인식에 도달했다”면서 “중국은 중한 양국이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하는데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덧붙임.

■ **中, 불법조업 中어선 겨냥 발포 韓해경에 “과격수단 사용말라”(연합뉴스)**

- 우리 해경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에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 중국이 선원을 위협할 수 있는 과격한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고 20일 촉구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해역

에서 어로관리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어업질서 유지보호를 위해 효과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발언함.

- 화 대변인은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과격한 수단을 동원하지 말기를 바라며 어민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한다”고 지적함.

## 다. 한·일 관계

2017. 12. 17.

### ■ 아사히 “韓, 北화성-15 발사후 한일국방장관 통화요청 거절”(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호 발사 직후 한국 국방장관과의 전화 회담을 요청했지만 중국을 배려한 한국 측의 소극적 태도로 성사되지 않았으며, 사실상 거절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일본 측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과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 사이의 전화 회담을 통해 한일 간 방위 협력과 결속을 과시하려 했지만, 한국측은 청와대의 대책회의와 국회대응 등으로 바쁘다며 전화 통화에 소극적이었고 결국 통화가 불발됨.
- 이에 우리 국방부는 당일 주한 일본 무관부를 통해 한일국방장관 간 통화요청이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상부 대책회의와 국회 긴급 현안 보고 등으로 일정을 잡기 어려웠고, 이어 개최된 한미일 차관보급 화상회의로 충분한 정보교환이 있어 (한일 국방부 장관 간)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으며, 중국을 배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힘.

2017. 12. 18.

### ■ “日, 文대통령 방일안 대응어부 검토…위안부합의 준수가 조건”(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에 응할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함.
- 통신은 “연내 개최가 어려워진 한·중·일 정상회담과 분리된 문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위안부 한일합의를 지키는 것이 사실상 조건이 될 것’(총리관저 관계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전함.
- 통신은 “문 대통령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서 강하다고 전함.

2017. 12. 19.

■ **한일 외교장관 “강한 대북 압박과 대화 위한 외교노력 지속키로”(연합뉴스)**

- 한일 외교장관은 19일 도쿄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가진 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과 더불어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함.
- 강경화 장관은 회담에서 한일간 위안부 합의 과정 등을 조사하는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TF)와 관련된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으며, 이에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가 “착실히 실시(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장관에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힘.
-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하려다가 지금까지 연기된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일본에서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내년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한일 국장급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함.

■ **文대통령 “과거사 어려움 지혜롭게 극복 희망”…아베에 메시지(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보낸 구두 메시지를 통해 “양국간 과거사로부터 비롯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힘.
- 문 대통령은 또 “이러한 노력을 통해 김대중-오부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내년에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함.
- 문 대통령은 “총리님과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의견교환을 해나가길 바라며, 평창올림픽 때 총리님을 평창에서 만나 뵙고 환영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아울러 한일중 정상회의가 조속히 개최되어 총리님을 일본에서 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2017. 12. 20.

■ **강경화 “文대통령, 평창올림픽전 일본 방문 논의 없어”(연합뉴스)**

- 강 장관은 20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방일 추진에 대해 “고려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평창 올림픽 전에 별도로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정부 내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방일 기간 나눈 대화에 대해

- 보고를 드리면 대통령이 결정을 할 일이지만, (현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연계해 일본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는 “(방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내 일정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검토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계기가 되고 여건이 되면 조속히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 강 장관은 “한일 합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면서 “하지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갈등을) 극복할 입장을 내놓는 것도 급선무다. 이 문제를 잘 풀어간다면 내년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임.

## 2017. 12. 21.

### ■ “외무상, 강경화 장관에 ‘아베 평창 참가 어렵다’ 전달”(연합뉴스)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지난 19일 일본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강 장관은 도쿄 이쿠라(飯倉)공관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아베 총리를 평창에서 환영하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함.
- 그러나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2015년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대로는 (참석이) 어렵다”고 답함.

## 2017. 12. 22.

### ■ 한일, 21~22일 도쿄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연합뉴스)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22일 일본 도쿄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 외교부는 “이번 협의는 한일 외교장관회담(19일) 후속 협의로서, 양측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11월 29일) 이후 북핵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한의 의미있는 대화 복귀 유도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일 수석대표는 추가 도발 가능성을 포함한 북한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의 후속 행보별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7. 12. 18.

- **中, 틸러슨 대북 대화 발언 ‘후퇴’에 “의미있는 한 걸음 가길”(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근래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발언했다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 외교부가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촉구함.
  -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틸러슨 장관의 대북 발언들과 관련한 평론을 요구받고 이런 입장을 피력함.
  - 화 대변인은 “대화과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규정과 정신을 준수하고 한반도 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 **中 “미국기안보전략, 미중 상호 신뢰에 기여해야”(연합뉴스)**
  - 중국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이 경쟁국으로 규정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미·중 양국은 호혜 상생으로 관계로 상호 신뢰에 기여해야 한다고 18일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런 입장을 표명함.
  - 화 대변인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중미 전략의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국제 평화 및 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발언함.

2017. 12. 19.

- **트럼프 “중·러는 라이벌”...‘열강들의 경쟁시대’ 환원 선언(연합뉴스)**
  -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18일(현지시간) 공개됨.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1개월 만에 내놓은 이 전략 보고서는 ▲ 본토 및 미국민 보호 ▲ 미국의 번영 증진 ▲ 힘을 통한 평화 유지 ▲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미국의 4대 핵심 이익으로 꼽고 이를 분야별로 구체화한 청사진을 열거함.
- 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상반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하며, 이를 위해 기술과 선전전, 강압적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 구도 재편을 꾀하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공식 명시함.

#### ■ 중국, ‘中=경쟁자’ 美안보전략에 반발…“대립시 모두 패배” 경고(연합뉴스)

- 19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주미 중국대사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신국가안보전략에 대응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신국가안보전략이 양국이 처한 현실에 맞지 않다고 규정하고, 미중이 대립하면 모두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함.
-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과 동반자관계 발전을 바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대립되는 위치에 놓고 있다”면서 “이는 모순될 뿐아니라, 미중 양국의 이익이 서로 융합하고 의존하는 현실과도 맞지 않고, 미중 양자 및 국제 문제에서 협력하려는 노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또 “미중 양국이 협력하면 함께 승리하겠지만 대립하면 모두 패배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상호 존중의 기초위에서 미국 등 세계 각국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를 바라며 미국이 중국의 발전에 적응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함.

#### ■ 中외교부, 美신안보전략 겨냥 “냉전·구시대적 사고 버려야”(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신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대해 “중국은 협력만이 중국과 미국의 유일한 올바른 선택으로 일관되게 생각한다”면서 “공영만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발언함.
- 또한 “중국은 미국이 고의적으로 중국의 전략의도를 왜곡하는 것을 멈추길 촉구한다”면서 “(미국이)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 등 구시대적인 관점을 버리지 않는다면 스스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함.
- 그는 중국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국가와 어떤 보고서든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려 한다면 모두 헛수고일 뿐”

이라며 “중국은 절대 다른 국가의 이익을 희생해 자기의 발전을 추구하지 않고, 이와 동시에 절대 자기의 정당한 권익을 포기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함.

2017. 12. 21.

■ **중국방부 “美 신국가안보전략 사실 왜곡…中, 패권 추구 안 해”(연합뉴스)**

- 중국 국방부는 21일 런궈창(任國強) 국방부 대변인 명의로 올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 중 중국과 중국군 관련 내용에 관한 담화’를 통해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힘.
- 런 대변인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는 중국의 국방현대화 건설을 과장되게 조작하고, 중국의 군사력 발전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면서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 정신과 중미관계 발전의 큰 방향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함.
- 중국이 미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과 적극적인 방어 군사전략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어느 국가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박함.

나. 미·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미·러 관계

2017. 12. 16.

■ **트럼프 “푸틴과 주로 北문제 얘기해, 러시아 도움 원한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길 원한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주된 요점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서 이같이 밝힘.
- 그는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돕고 있지만, 러시아는 돕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함.

■ **러, 대북 압박 강화 美요구 거부...“어떤 제재도 성과 못낼 것”(연합뉴스)**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6일(현지시간) 하루 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한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 결과에 대해 논평하며 “미국의 입장에 북한에 대한 추가적 압박을 요구하는 강력한 요소가 다시 등장한 것은 슬픈 일”이라고 지적함.
- 라브코프 차관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든 나아가 미국이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불법적인 일방 제재든, 어떤 제재 압박 조치도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미 오래전에 이 협박, 압박, 공갈, 전제조건 제기 등의 경쟁을 중단하고 정치적 해결의 실질적 모색으로 이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또한 “대안은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제안한 ‘로드맵’에 포함돼 있다”며 한반도 사태의 평화적·단계적 해결 방안을 담은 로드맵 이행을 촉구함.

2017. 12. 19.

■ **러시아 “美 새 국가안보전략, 제국주의...새 국제질서 부정” 비판(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국제질서의 변화를 부정하며 제국주의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난함.
-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1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제국주의 성격이 명약관화하다고 평가절하함.
- 페스코프 대변인은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은 일극체제를 포기하기를 거부했다”고 지적하며, “한결같은 거부”라고 비판함.

라. 중·일 관계

2017. 12. 22.

■ **중·일 해빙 무드에 日대형은행들 중국서 ‘판다 채권’ 발행(연합뉴스)**

- 생각됐던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일본 메가뱅크(대형은행)들이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 '판다 본드'를 처음 발행한다고 니혼게이지사이신문이 21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과 중국 재정성은 일본기업이 중국본토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인가에 필요한 정보교환 틀 마련에 22일 합의할 예정이며, 정보교환 틀에는 양국 정부 사이에 회계감사법인의 감독이나 감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이번 조치로 일본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이 늘어 중국 사업을 확대하기 쉬워질 전망이며, 판다 채권 발행 증가를 통해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에 탄력을 불어려고 함.

## 마. 중·러 관계

2017. 12. 20.

### ■ 中·러 외교수장 전화통화·한반도 문제 논의(연합뉴스)

- 20일 중국 외교부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날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힘.
- 중국 외교부는 “양측은 중러 관계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적극적인 성과를 거둔데 높이 평가했다”면서 “한반도 문제와 공통 관심을 두는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또한 “양측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힘.

## 바. 일·러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Ⅲ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2.19	폴란드 “북한인 노동자 내년까지 40% 감축”(미국의소리)
	12.20	유엔총회, 13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이산가족 조차 촉구(연합뉴스) 북 노동자 쿼터 동결에 러 극동지역 인력난(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12.18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주민 고난도 커진다(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12.17	경기도, 기대 모았던 남북교류협력사업 '내년으로'(연합뉴스)
	12.20	통일부 “북한인권결의 억류자 보호 최초 반영 주목”(연합뉴스) 인권위원장 “유엔 北인권 결의 환영...철저히 이행돼야”(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2.19	영국 국적 취득 북한인 1990년 이후 363명...2010년부터 급증(미국의소리)
	12.21	북한군·북한주민 귀순 잇따라...올해 귀순자 작년보다 3배 증가(연합뉴스)
	12.22	일본인 남북피해자 가족들, 의회에 조속한 문제해결 촉구(미국의소리)
대북지원	12.19	올해 국제사회 대북지원 22% 감소...공여국도 절반으로 줄어(미국의소리)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12. 19.

### ■ 폴란드 “북한인 노동자 내년까지 40% 감축”(미국의소리)

- 폴란드 정부는 자국내 북한 노동자 규모가 내년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힘.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현재 462명 수준인 북한 노동자 수가 매년 급감할 것이라는 설명임.
- 폴란드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서와 임시 거주증 발급 중단에 따라 내년까지 북한인 근로자 40%가 폴란드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 2019년에는 추가로 30%의 북한인 노동자가 출국할 것이라며,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노동 허가를 받은 북한인 근로자들의 체류 가능 기간이 점차적으로 만료될 것이라고 설명함.
- 폴란드 외무부는 18일,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폴란드만 상당한 숫자의 북한 노동자를 국내에 두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최근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함.
- 폴란드 외무부는 국무부가 유독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인권 보호 원칙 등을 준수하며 적절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함.
- 폴란드 법령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자국내 북한인 근로자를 즉시 추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임.

2017. 12. 20.

### ■ 유엔총회, 13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이산가족 조치’ 촉구(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를 통과함.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 이후로 13년째임.
-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판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
- 어느 회원국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진행됨. 앞서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제3위원회도 지난달 14일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처리한 바 있음.
-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2~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4번째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 논의를 비판했고, 중국·러시아 대표부도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다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음.
-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음. 인권유린의 사례로는 고문·강간·공개처형·연좌제·강제노동 등을 적시함.
-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억류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됨.

#### ■ “북 노동자 쿼터 동결에 러 극동지역 인력난”(자유아시아방송)

- 러시아 정부가 내년 북한 노동자 추가 고용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그 동안 벌목 등에 북한 노동자를 대거 고용해온 극동 지역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극동 아무르 지역 한 언론(Телепорт)이 최근 전한, 북한 노동자 고용 동결에 따른 지역경제계의 우려 목소리임.
- 이 매체는 최근(10월 초) 아무르주 정부가 관내 지역 기업들이 내년에 북한 노동자 1천28명을 추가 고용하기 위한 쿼터를 신청했다 연방정부로부터 거부당했다고 전함.
- 러시아 당국의 북한 노동자 쿼터 불허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 차원임.
- 다만 현재 고용돼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당장 북한으로 돌려보낼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12. 18.

#### ■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주민 고난도 커진다(연합뉴스)

-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좌절시키기 위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18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북한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들이 의료기기를 포함한 구호물자를 확보하거나 구호 프로그램에 필요한 돈을 송금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우리는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함.

- 현재 북한에서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개발계획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기반한 소규모 인도주의 단체들도 식량·의약품 제공, 농업 지원 등을 하고 있음.
- 하지만金正은의 계속된 핵·미사일 실험으로 미국 직접 제재와 다자제재가 잇따르자 구호단체들마저 활동을 중단하거나 철수하고 있음.
- 미국을 기반으로 여러 인도주의 단체를 회원으로 둔 북한문제 전국위원회의 키스 루스 전무는 “제재의 목적이 국제 인도주의 NGO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들이 제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12. 17.

#### ■ 경기도, 기대 모았던 남북교류협력사업 ‘내년으로’(연합뉴스)

- 새 정부가 들어서며 기대를 모았던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 악화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함.
-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집행한 예산은 모두 21억원임.
- 그나마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은 지난 6월 외국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을 통해 북한 결핵 환자 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집행한 것이 유일함.
- 나머지는 국내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대북지원 국제학술회의 개최, 개성공단 입주기업 판로 지원, 중국 교포를 대상으로 한 민족공동체 지원사업,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 북한의 의지와 무관한 사업에 집행됨.
- 경기도는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을 기대하며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과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벌여 모두 50억원을 집행할 계획임.
- 그러나 좀처럼 남북관계가 나아지지 않아 준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내년으로 미룸.

2017. 12. 20.

#### ■ 통일부 “북한인권결의 억류자 보호 최초 반영 주목”(연합뉴스)

- 통일부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 억류자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된 점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힘.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북한)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기본적 보호, 생사확인 및 가족과의 연락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에 최초로 반영된 점에 주목한다”고 말함.
- 백 대변인은 또 “북한인권결의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 방문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힘.
- 그는 “아울러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임.
- 정부는 북한에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 인권위원장 “유엔 北인권 결의 환영…철저히 이행돼야”(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유엔 총회가 전원 동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북한 당국은 결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함.
- 이 위원장은 “이번 결의는 북한 당국에 인권침해 중단, 강제수용소 폐쇄, 복송된 주민들의 인간적 처우,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 등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이 유엔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함.
- 이어 “인권위는 지난달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유엔 차원의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번 결의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함.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12. 19.

#### ■ 영국 국적 취득 북한인 1990년 이후 363명...2010년부터 급증(미국의소리)

- 1990년 이후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가 363명으로 집계됨. 특히 난민으로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한 2010년 이후 급증세를 보임.
- 2010년 이전에는 해마다 한 자리 수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던 영국 시민권 취득

- 북한 국적자 수가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함.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307명으로, 1990년 이후 전체 취득자 363명의 85%를 차지함.
  - 김 사무총장은 영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는 선거권 등 정치적 참여 여부라고 말함.

## 2017. 12. 21.

### ■ 북한군·북한주민 귀순 잇따라…올해 귀순자 작년보다 3배 증가(연합뉴스)

- 올해 선박을 이용하거나 휴전선을 넘는 등의 방식으로 귀순한 사례가 늘어 주목됨.
- 북한 주민 2명이 20일 어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넘어와 귀순한 데 이어 21일 오전에는 북한군 초급병사 1명이 최전방 중서부 전선 우리 군 GP(비무장지대 소초) 전방으로 귀순함.
- 지난달 13일 오 모 병사가 추격조의 총격을 받으면서 관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넘어온 지 한 달여 만에 잇따라 귀순자가 잇따라 나온 것임.
-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들까지 포함해 올해 귀순자는 총 9회에 걸쳐 15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 중 북한 군인이 넘어온 것은 4회에 걸쳐 4명임.
- 지난해 군인 1명을 포함해 3회에 걸쳐 5명이 귀순한 것과 비교하면 귀순자 총 규모가 3배 증가한 것임.

## 2017. 12. 22.

### ■ 일본인 납북피해자 가족들, 의회에 조속한 문제해결 촉구(미국의소리)

-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들이 의원들을 만나 조속한 문제 해결을 당부함. 가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행동을 촉구함.
-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인 요코타 사키에 씨는 문제 해결에 전혀 진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
- 이어 자신의 딸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도 도움과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함.
- 아울러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나라 지도자의 대화를 촉구함.
-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가족 연례대회’의 이즈카 시게오 대표는 납치 문제가 발생한 지 40년, 그리고 피해자 구출 노력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상기시킴.

- 그러면서 의원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함.

## 5. 대북지원

2017. 12. 19.

### ■ 올해 국제사회 대북지원 22% 감소...공여국도 절반으로 줄어(미국의소리)

- 올해 유엔과 각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이 지난해에 비해 22% 감소함. 북한을 지원한 나라도 절반으로 줄어듦.
-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자료는 원조국들과 국제기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올해 국제사회 대북 인도주의 지원액을 3천540만여 달러로 집계함. 하지만 이 자료에는 스위스 정부의 올해 총 대북 지원이 아닌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지원한 자금만 포함돼 있음.
- 올해 대북 지원을 한 나라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함. 캐나다와 프랑스,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 7개국으로 지난해 12개 나라의 절반 수준임. 지난해 지원했던 중국과 독일, 호주, 인도, 덴마크, 태국이 빠짐.
- 특히 호주 정부는 지난해 세계식량계획 WFP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마지막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힘.